
2023년 행정안전부 정책 방향 업무보고

2023. 1. 27.

행정안전부

순서

I. 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	1
II. 대내·외 정책여건 및 행정안전부 역할	2
III. 핵심 추진과제	4

I. 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

1 주요 성과

□ 일 잘하는 정부 기반 구축 및 국민체감 디지털서비스 제공

- 그간 확장 중심 정부 조직 운영 기조 전환, 불필요 위원회 정비
※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안 마련(국회 계류중), 총 636개 위원회 중 245개 정비(39%) 추진
- 디지털플랫폼정부에 걸맞는 대국민서비스 확대
※ 위원회 출범(22.9.),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발급(7.28.), 국민비서 가입자 1,500만명 돌파(10.13.)
- 국민 디지털정부서비스 이용률 제고* 및 우수한 국제평가** 달성
* 전체: '18년87.5%→ '22년92.2%(90%대 첫 진입), 고령층: '18년58.1%→ '22년77.2%
** '22년 'UN 전자정부평가' 3위(세계 유일 7연속 3위 이내), 세계은행 '디지털정부 성숙도' 1위

□ 진일보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토대 마련

- 자치분권-균형발전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, 자치입법권 제약법령 정비
※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안 국회 제출(11.2.)
- 지방소멸 대응 위한 법·제도적 기반 강화
※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정(6.10.),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(1조 7,500억원)
- 책임성·자율성 강화 중심의 「새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」 수립(9.26.)
※ △재정지출 건전성 △지방세입 안정성 △지방공공기관 혁신 △지역경제 회복 등

□ 각종 재난 총력 대응 및 안보위협 대비태세 확립

- 호우, 지진, 화물연대운송거부 등 조기수습 위해 중대본 신속 가동
- 민·관 참여 안전 캠페인 등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활동 추진(8.17.~11월)
※ 안전취약시설 26,363개소 집중 안전점검(8.17.~10.14.) 및 안전한국훈련 병행
- 이태원 참사 계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수립 추진
- 을지연습 전국단위 정상실시*, 국지도발 대비 대응역량** 강화
* 4천여개 기관, 58만여명 참여 / ** 민방위 종합개선 대책 마련, 민방위복제 개편 추진

2 보완 필요사항

-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자연·사회 재난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시스템 점검 및 개선 요구
-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 위해 이전과는 차별화된 정책 추진 필요

II. 대내·외 정책여건 및 행정안전부 역할

1 대내·외 정책여건

- '자유'의 기본바탕인 '안전한 삶'에 대한 국민 요구 증대
 -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해 자연재난 빈도 증가 추세*,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라 대형 사회재난도 지속 발생**
 - * 기상특보 횟수(건) : ('17) 1,409 → ('18) 1,498 → ('21) 1,856 → ('22) 1,773
 - ** '22년 주요 사회재난 : 광주 아파트 공사장 붕괴,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, 이태원 참사 등
 - 고령화 등에 따른 재난안전 사고 취약 계층 증가, 신종 안보위협 현실화* 등으로 국민불안 심화
 - * 예) 드론 테러 및 사이버 공격, GPS 교란, EMP 공격 등
-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'지방시대' 필요성 대두
 - 수도권-비수도권의 격차가 확대*되어 지역 간 불균형 심화
 - * 비수도권 비중('15→'21) : (인구) 50.6%→49.6%, (GRDP) 49.9%→47.2%, (취업자) 50.2%→48.6%
 - 지자체 중 40%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*되는 등 지방소멸 우려 점증
 - *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('21)
-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
 - 기술발전에 따른 민간서비스 혁신을 공공부문에서도 적극 도입 필요
 - 문제를 해결하는 '일 잘하는 정부'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 증가
 - ※ OECD 평가 '정부신뢰도' 20위('21년), 세계은행 평가 '정부효율성' 20위('22년)
- 경제위기 극복 및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 필요
 - 고물가·고금리 지속, 글로벌경제 침체 등 복합경제위기 우려 및 민생경제 어려움 지속
 - ※ '23년 전망(기재부) : 경제성장률 1.6%, 소비자물가 3.5%
 - 복지수요 증가*, 코로나19 대응 등에 따른 확장적 지출로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
 - * 총 지방예산대비 복지예산 : ('17) 25.6% → ('20) 29.7% → ('22) 30.5%

2 2023년 정책 기조

- 급변하는 환경 속에 복합위기 극복, 국민안전 확보, 국정성과 창출, 미래도약 기틀 마련을 위해 국정의 중추부처로서 범정부 개혁노력 선도
-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 요소를 타파하고, 하나의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-지방간 협력 강화

3 행정안전부의 약속

비전

일 잘하는 정부,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

5대 약속

<p>약속 1</p> <p>「일상이 안전한 나라」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 ② 일상화된 안보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 ③ 촘촘한 생활안전망 구축
<p>약속 2</p> <p>「활력 넘치는 지방시대」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지역주도 경제 활력 회복 ② 기회균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③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자치개혁 촉진
<p>약속 3</p> <p>「일 잘하는 정부」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정부혁신과 현안해결의 플랫폼 역할 강화 ②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③ 군살없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
<p>약속 4</p> <p>「함께하는 위기극복」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② 어려운 민생살리기 총력 지원 ③ 지방 행정·재정의 건전성 확보
<p>약속 5</p> <p>「성숙한 공동체」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민간단체 지원 투명성 제고 ② 미래지향적 과거사 문제 해결 ③ 자원봉사 활성화 촉진

경찰
소방

민생치안 확립 및 준법질서 구현

선진 소방안전체계 구축

Ⅲ. 핵심 추진과제

약속 1 「일상이 안전한 나라」

- ◇ “재난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,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” (22.11.7,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회의)

1.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

<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개요>

- ✓ “함께 만드는 「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」”을 비전으로, “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,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”을 목표로 설정
- ✓ 재난안전관리 체계 패러다임을 **대전환**(관점, 방식, 행동)하고, **5대 추진전략***과 **65개 세부과제**를 추진
 - * ①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, ②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, ③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, ④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재난피해 지원 강화, ⑤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

□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상시적으로 대비

- (신종재난 발굴) ^{가칭}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^가를 신설하고, 연구원·지자체·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위험요소 상시 발굴·평가 및 관리
 - ※ 부처별·지역별 위험분석 결과를 안전관리계획 등에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
- (환경변화 대비) 기후변화에 대비한 침수방지대책*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, 디지털 위험에 대비한 핵심기능 다중화 등 추진
 - * 침수방지시설 법적 실행력 제고(별칙 마련),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지원 등

□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

- (상시 상황관리) 시·도 외에 시·군·구의 재난상황실을 365일, 24시간 운영*하여 위험상황 인지·보고 등 초기 상황관리 강화
 - * (현행) 228개 시군구 중 49개 상황실 운영 → (개선) 쉰 시군구 상황실 운영
 - 지능형 CCTV 확충(27년 구축완료), CCTV 영상정보 활용 강화(기관간 연계)
- (협력·역량 강화) 지자체·경찰·소방 협력체계 강화*, 시·도 단위 이원화된 자치경찰 도입, 자치단체장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및 재난안전교육 필수 이수,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
 - * 자치단체 중심 통합적 대응, 평시 경찰·소방의 지역 안전관리 참여 및 역할 확대 등
- (훈련·매뉴얼 개선) 신종·복합재난 대응 강화 국가훈련 체계 개선*, 주요 이슈별 중점훈련**, 매뉴얼 디지털화·원페이지화를 통한 활용 강화
 - * 훈련모델 개발, 평가 개선, 합동훈련 중점 등 / ** KTX 터널사고, 풍수해 침수사고 등

□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구현

- (데이터 통합관리) 재난관리책임기관(58개)별 분산 관리하는 데이터 (1,953종)를 통합·공동활용할 수 있는 「재난안전정보통합플랫폼」 구축
 -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원스톱 제공 서비스 창구인 「국민안전24」 신설
- (시스템 고도화) 수해·지진·산불·감염병 등 각종 재난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예측·감지 및 모니터링 강화*,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
 - * 관측망 확충 및 예측모델 고도화, ICT·지능형CCTV·AI 등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

□ 재난피해 지원 현실화 및 국민의 안전 역량 강화

- (피해 지원 내실화) 주택파손 지원기준 상향 및 생계수단 업종 지원 방안 마련, 신속 피해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 강화
 - ※ 공동체 회복(생활 인프라 정비, 지역경제 활성화 등)까지 고려한 종합복구 제도 마련 추진
- (안전교육·문화)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내실화, '1시도 1안전체험관' 건립,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·국민운동3단체 등과 안전교육·문화활동 강화
- (민간주도 안전관리)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(재난전담조직 등 인증) 보급 확대, 민간의 자기규율 산업재해 예방체계 확립*
 - *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, 재발방지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 운영, '25년까지 단계적 의무화

<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>

- ▶ (안전관리 강화) 재난 유형에 '인파사고'를 포함하고, 주최자가 없는 축제·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(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 수립) 마련
 - 다중운집 매뉴얼 전면개정(경찰청, 매뉴얼 명칭 변경 검토), 위험 장소·상황별로 세분화된 국민행동요령 마련 등
- ▶ (상황분석·전파) 인파사고 위험도를 분석하고 예·경보하는 현장인파관리 시스템 구축,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도입 등 상시 위험상황 관리
 - 상황실 간 중요 재난상황 신속 공유, 보고 지연 시 차 상위자 직보(경찰), 긴급문자 발송 단계 간소화(4단계 → 2단계) 등
- ▶ (구조·구급 및 지원) 소방·DMAT(재난응급의료팀) 정보공유 강화를 통한 신속출동, 소방의 구급지휘팀 운영, 현장 중심 대규모 합동훈련 추진
 - 재난 심리지원 대상 확대(현장요원, 목격자 등), 피해자 등에 수습상황 및 지원제도 등 적극적 정보 제공

2. 일상화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

□ 신종 안보위협에 대한 완벽한 대비태세 확립

- (훈련 중점) 새로운 안보위협(드론공격, 공급망 붕괴 등)에 대비한 **총무계획 중점 보완**, 실제와 같은 **현장 중심의 을지연습*** 및 총무훈련 실시
* (현행) 단순 메시지 처리 → (개선) 위게임 방식 적용 모델 개발(~'26년)
- (비상 대비)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구축('23~'26년)으로 전시 동원자원 및 비축물자 정보 표준화·DB화

□ 국지도발 대비 주민보호 만전

- (경보 전달) 다양한 전달 수단 **확충*** 및 전달시간 **단축**** (5분→2분)
* TV자막 방송사 확대(10개→160개), CBS·DMB 문자 방송 송출 의무화 등
** 경보통제시스템과 재난문자 방송 시스템 연계, 경보발령전파(중앙→ 시도) 자동화 등
- (민방위) '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 재개(5월), 민방위대 편성 개편(시범) 및 실전 교육·훈련 실시, 접경지역 대피시설 **확충** 등
※ (복제개편) 비상근무복 최종안 확정('23.上), 현장 활동복 시안 마련 및 시범 적용(~'24년)

3. 촘촘한 생활안전망 구축

□ 어린이 등 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

- (취약층 통계) 어린이·노인 등 대상 재난안전 피해 국가 통계체계 구축
※ ('23) 통계설계(연구용역) → ('24) 사전조사, 국가승인통계 지정 → ('25) 통계 생산
- (어린이 안전) 어린이 이용·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*
* 종사자 안전 교육 지원 확대(연 7만명 → 10만명), 신종유사놀이기구 위험성 평가 추진

□ 보행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 확대

- (환경 정비) 빅데이터 기반 교통약자 사고 다발지 등 정비, 전국 이면도로 **보행환경 실태조사** 추진, 보행자 우선도로 활성화 위한 **맞춤형 지원*** 등
* 재난특교세 등 조성비용 지원 + 환경정비·사후관리 컨설팅 일괄 지원

□ 국민참여 안전 신고·제안·점검 활성화

- (참여 창구) 「국민안전제안」 창구 상설·활성화, 경찰청 「스마트 국민제보」 신고기능 시스템을 「안전신문고」로 통합('23년)
- (주민참여 안전강화) 현장에 밝은 이·통장, 지역자율방재단, 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하는 읍·면·동 단위 **안전협의체** 구성
※ 이·통장의 안전관리 등 임무 확대와 연계한 기본수당 인상 등 추진

약속 2 「활력 넘치는 지방시대」

- ◇ “지방시대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며, 지방시대위원회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챙기겠음” (22.10.7,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)

1. 지역주도 경제 활력 회복

□ 기업의 지방이전 환경 조성 및 지방소재 기업 지원 강화

- (이전 유도)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
 - 범부처 추진체계 운영을 통해 맞춤형 입지 공급,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, 재정·세제 혜택*,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강력한 지원방안 논의·추진
 - * 예) 이전기업 대상 지방세 특례, 기회발전특구 내 재정·세제·규제 특례 패키지 지원 등
- (기업 지원) 지방교부세 및 계약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 기업 지원 강화
 - (교부세) ①기업 활동에 수반되는 지자체 재정소요 뒷받침(산업단지 수요에 산업경제비* 추가) ②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액의 300%를 교부세 수요에 반영 등
 - * 예) 상하수도 등 인프라, R&D 지원, 중소기업 인력양성, 수출판로지원 등
 - (계약 제도)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 특례* 연장(~23.6월) 및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**
 - * 입찰·계약보증금 인하(50%), 수의계약 절차 완화, 검사·대가지급기간 단축
 - **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 상향(2.1억 → 3.3억, '21년기준 2,735억원 규모 수주 확대 효과)

□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지자체 및 민간 자율성 강화

- (규제권한 이양) 국토, 환경 등 각종 분야의 인허가·승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, 지자체가 기업 지원·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행안부가 플랫폼 역할 수행
- (지방규제 혁신) 지역 현장의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추진, 지자체 내부의 그림자·행태규제 지속 정비 및 모범사례 확산
 - ※ 예) ①덩어리규제: 산업단지 입주업종, 외국인 근로자 고용, 수변구역 활용 등 제한
 - ②그림자·행태규제: 사업내용 중복 심의, 인허가 처리지연, 과도한 요금 부과 등

□ 주민참여 로컬브랜딩 사업 본격 추진

- (생활권 경제활성화)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*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(연 10개 지역 내외), 성과 확산 등 통해 지역 특색 기반 지역경제활성화 도모
 - *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전략(예: 임실 치즈마을)

2. 기회균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

□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지방분권-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

- (특별법 제정)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」을 조속히 제정(국회제출 '22.11.2.)하여 위원회 출범근거 마련
- (위원회 지원) 기획단 발족 및 '지방시대 종합계획(5년)' 수립 등 지원

□ 인구감소 위기 극복 + 생활인구 활성화

- (전방위 지원) 상향식 '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' 수립, 특례 추가 발굴 및 교부세*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·재정 지원 강화
 - * 교부세 지원 확대(1조원→2조원), 창업사업장 이전사업전환기업 대상 취득세 감면(50~100%) 확대 등
- 지방소멸대응기금(연 1조원)과 타 사업간 연계*를 통한 효과성 제고
 - * 은퇴자·귀촌자 등을 위한 '지역활력타운' 조성(행안부, 국토부 등 5개 부처 협업) 등
- (생활인구) 인구 정책의 획일성 극복을 위해 생활인구* 본격 도입, 생활인구를 고려한 각종 제도 적용 및 지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
 - * ① 주민등록 인구 ② 통근·통학·관광 등 체류인구 ③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 신고 인구
- 일부 인구감소지역 시범실시('23년) 후 쉰 인구감소지역 확대('24년)

□ 지역 주도 발전을 위한 정책 환경·제도 개선

- (재정자주권) 1·2단계 재정분권*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지방 자율·책임 중심의 지방재정 자주권 제고방안 수립
 - *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국세지방세 비중 조정 등 세입 확충 중심(1단계 19~20년, 2단계 22~23년)
- (맞춤형 자치모델 도입) 특별자치시·도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, 특별지자체 설치 지원,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, 지역수요 기반 행정구역 개편 지원 등
- (고향사랑기부제 안착) 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를 통해 기부로 형성된 관계가 방문으로 이어지는 지역활력 선순환 체계 구축
 - ※ 매력적인 답례품 제공,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금사업 추진, 고향사랑의날 지정 등

- ✓ 국정중추부처로서 지방의 의견을 종합, 중앙에 전달하고 국정 통합성 확보를 위해 중앙의 핵심 국정과제를 지방과 공유·추진
 - (소통 강화) 대통령 주재 「중앙지방협력회의」(분기 1회) 및 행안부장관 주재 「중앙지방정책협의회」(월 1회) 운영 내실화(수렴된 의견의 체계적 관리·반영)
 - (현장방문) 지역 애로사항 청취·해결을 위해 지역별 긴밀한 소통 지속
 - (평가·환류) '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'로 국정주요시책 통합성 확보

3.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자치개혁 촉진

□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이관 검토

- (기능 이관) 지자체 기능과 유사·중첩되는 특행기관* 이관 또는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행정효율성 및 대국민서비스 제고
 - * '21년말 기준 24개 부처의 일선 지역행정기관 5,095개 운영 중
-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특별자치도(강원, 전북), 특별지자체(초광역메가시티)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**소 지자체 이관 확대**
- (이관 분야) 중소기업·고용·환경 분야 우선 검토하되, 지자체 수요조사 및 기능진단을 토대로 정비방안 마련

□ 일반자치-교육자치 관계 재정립 추진

- (일반-교육자치 관계 재설정) 시·도지사과 교육감 선거 '러닝메이트제' 도입 대비 일반-교육자치의 통합성 제고를 위해 **필요한 대책 추진**
 - ※ 현재 러닝메이트제 관련 「공직선거법」 및 「지방교육자치법」 개정안 국회 계류 중
-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**교육 기능 수행체계 재설계, 시·도-교육청 정책·재정 협력 강화**
 - ※ 시도-교육청 간 협력 사무(교육자유특구, 돌봄 등) 효율화, 지방대학·R&D 지원 권한 확대 등
- (교육전출금 자율화) 재정상황 및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여 시·도의 **교육전출금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**(교육부 협의)
 - ※ (현행) 시·도 보통세의 일정률 의무 전출 → (개선) 법정률 내 시·도 조례로 결정

□ 지방공공기관 혁신 본격 추진

- (구조개혁) 유사·중복기관 통폐합, 민간 경합사업 정비* 등 구조개혁 과제를 주기적으로 발굴하고, 이행점검 및 평가 후 우수사례** 확산
 - * 예) 골프장, 콘도, 매점, 주차장 등 → 민간위탁·이양 등 정비
 - ** 예) 경북: 기관수 감축(25→18개),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 시스템 도입
- (부채)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 기준 강화* 등을 통해 적극적 부채 관리
 - * 재무상태 전반 평가를 위해 선정지표 추가 검토(금융부채 비율, 이자보상 배율 등)
 - ※ (지방공기업 부채비율) '21년 33.8% → '26년 30% 수준 관리
- (남של 예방)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사전 검토 강화*로 남של 억제
 - * 예) 시군구 출자 : (현재) 지방연구원 검토 → (개선) 일정규모 이상 행안부 지정기관 검토
출연 : 조직최소규모(시도 28명, 시군구 20명), 부서별 최소인원 등 설립 표준모델 제시

약속 3 「일 잘하는 정부」

◇ “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가 바로 일 잘하는 정부”
(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)

1. 정부혁신과 현안해결의 플랫폼 역할 강화

국정과제

✓ ‘정부신뢰도’(OECD), ‘정부효율성’(세계은행) 평가 : ’22년 20위 → ’27년 10위권

□ 투명하게 공개하고, 국민의견을 소중히 여기는 열린정부 구현

- (정보·데이터 공개) 국민관심정보를 발굴해 표준화된 양식으로 사전공개 강화, 네거티브 방식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실현 위한 체계 정비*
 - * 데이터 비공개 시 관련 증빙을 필수화하도록 시스템 개선
-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공유·연계·활용 강화 위해 「공공데이터법*」 및 「데이터기반행정법**」 개정 추진
 - * 개별법 상 공공데이터 제공 저해요인 평가 도입 등 / ** 범부처 데이터 공유체계 마련 등
- 데이터 친화적 행정문서 혁신*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**
 - * 원문사전공개정보를 기계판독성이 높은 개방형으로 제공 / ** 17개 시도 교육청까지 대상 확대
- (국민제안 정책화) 「청원24」(’22.12. 개통)로 접수된 국민 의견을 각 부처가 제도개선·규제개혁에 적극 활용토록 촉진하고,
 - 소관기관 미채택 우수제안은 「온국민소통」을 통해 다수 동의시 행안부 장관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프로세스 확립

□ 데이터 기반 상황 대응 및 현안해결 능력 제고

- (현안대응) 민·관 협업으로 재난·복지·재정 등 국가적 문제를 사전진단해 대응할 수 있는 「온라인 종합상황실*」 구축
 - * ’23년 BPR/ISP → ’24년 구축·운영
- (문제해결) 정부는 데이터 제공, 국민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‘시빅테크’ (Civic-Tech) 방식* 적극 도입
 - * 예) (정부) 장애인 시설정보 제공 + (시민) 데이터 활용 → 장애인 이동경로 제공 앱 개발
- (데이터 분석)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 및 콜센터 운영으로 기관별 맞춤형 분석 지원, 보이스피싱*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해결
 - * ‘한국형 음성데이터 분석모델’ 개발 완료(1분기), 보이스피싱·전세 사기 예방 등에 활용

2.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

□ 국민 기대에 부합하도록 보다 편리한 서비스 구현

- (통합 서비스)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·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
 - ※ '23년 BPR/ISP → '27년까지 포털 고도화·연계 확대
- (간편 로그인) 국민이 선호하는 하나의 ID와 원하는 방식*으로 모든 공공 웹 또는 앱에 로그인('23년 체계 구축 → '24년 시범 적용)
 - * 민간 전자서명(카카오톡, 통신사 PASS 등), 민간ID(SNS 인증), 모바일 신분증 등
 - ※ 모바일신분증은 현재 운전면허증 → '23년 국가유공자증 → '24년 주민등록증까지 확대
- (서비스 개방)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협업 강화
 - ('23.上) 선도서비스 6종* 민간 개방 → ('23.下) 20종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민 편의 제고 및 기업의 혁신서비스 창출 기회 제공
 - * 예)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·웹을 통해 기차표 예매, 자동차 검사 예약 등
 - 개인별 데이터와 필요서비스를 모아놓는 디지털 지갑 구축('23년 파일럿 서비스) 및 향후 민간 개방 추진(민간 지갑앱에서도 이용 가능)

□ 나에게 꼭 필요한 선제적·맞춤형 서비스 확대

- (마이AI) 개인별 데이터 분석 → 맞춤형 서비스 추천 → 신청까지 도와주고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 구현('23년 BPR/ISP → '25년 개통)
 - ※ 예) A씨 실직감지(건보 데이터) → 실업급여 신청, 구직사이트 안내 등 서비스
- (국민비서) 생활형 행정정보 알림·고지서비스 확대('22년 52종 → '23년 64종*)
 - * 지방세 고지(지방세 알림, 지방세입 전자송달 등 3종) 등 12종 추가
- (공공 마이데이터)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행정·공공기관이 보유한 내 정보를 전송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
 - 묶음정보 서비스 확대*, 본인의 정보에 대한 전송권뿐만 아니라 열람권 등을 추가하여 국민 데이터 주권 확대
 - * '22년 여권발급 등 59종 → '23년 100종으로 확대

3. 군살없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

국정과제

□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

- (정부) 조직진단 및 통합활용정원* 운영을 통해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되, 정부가 적극 일할 수 있는 여건 뒷받침
 - * 5년간('22~'26년) 매년 부처별 정원 1% 감축 및 범부처 공동으로 관리·활용
- 국정과제 및 당면 현안의 차질없는 추진과 정부 2년차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신속한 직제개정 등 기구 및 인력보강 지원
- (지자체) 조직 관리 부진 지자체 심층 진단 강화, 기준인력 증감 없이 신규 수요는 재배치로 해소 등 인력 운영 효율화 지원*
 - * 재배치 매뉴얼 배포 및 재배치 실적 우수 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 부여

✓ 첨단 IT 기술과 민·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선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, 읍·면·동 안전체계 구축을 통해 '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' 구현

□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

- (정부) 자율기구제도 관련 적용 대상기관*·운영기간** 확대 및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한 책임장관제 강화
 - * 대상기관 : (현행) 46개 중앙행정기관 → (개선) 국조실 등 확대 검토
 - ** 운영기간 : (현행) 1년(6개월+6개월 연장) → (개선) 1년이상 운영으로 확대 검토
-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 및 인력증원 비율의 상향(7%→10%)을 통해 부처의 조직 운영 자율성 제고
- (지자체) 조직협의 절차 간소화 방안 검토, 지역여건에 맞는 조직기준 정비* 등을 통해 지자체 조직 운영 자율성 제고
 - * 기구설치 기준이 되는 '인구' 기준에 외국인 수 포함 등

□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

- (업무자동화) 민간 디지털 기술 활용, 단순·반복 업무 자동화*
 - * '행정업무 자동화 사례와 절차 안내서' 마련·배포, 파이썬 활용 프로그램 도입 등
- (온북확산) 온북(2PC→ 1대 노트북) 전부처 확산*('27년까지 90% 전환)으로 공무원 업무환경 획기적 개선
 - * 사용연한 완료 PC 교체예산 활용, 「행정기관 온북 도입 가이드('22.7월)」에 따라 기관별 전환

약속 4 「함께하는 위기극복」

- ◇ “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 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” (‘23.1.3, 2023년도 제1회 국무회의)

1.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

□ 안전산업의 스케일업(Scale-up) 견인

- (총력지원) 「재난안전산업진흥법」 시행(‘23.1.5) 계기 체계적 육성 추진
 - 진흥시설 조성*, R&D 확대, 전문인력 양성, 해외진출 지원 등
 - * ‘23~’26년, 180억 투입, 국제인증·성능시험·제품상용화 등 지원
- (목표) 매출액 ‘21년 52조 → ‘27년 80조 이상

- ▶ 안전산업은 기업 영세성*, 투자 부족 등으로 산업비중** 미약
- * 74,000여 관련 사업체 중 매출액 5억 미만 57.8%(‘21년 기준 조사 결과)
 - ** 전체 산업 중 사업체수 1.54% 종사자수 1.73% 매출액 0.71% 점유(‘20년 기준 조사 결과)

□ 주소정보를 미래 신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

- (스마트 주소정보) 첨단기술과 스마트 주소정보* 연계 확대
 - * (현행) 2차원 평면 건물 중심 → (개선) 3차원 입체 건물·사물·공터로 확대
- (신산업 모델) 5개분야* 주소정보기반 신산업모델 개발·보급으로 상용화 견인
 - * 드론배송, 자율주행로봇배송, 자율주행차 주차, 실내 내비게이션, 사물인터넷



<드론 배송 실증 (2210)>



<자율주행로봇 배송 실증 (2211)>



<자율주행차 주차 실증 (2212)>

- (브랜드화) 우리나라의 우수한 주소체계를 국제표준(ISO)에 반영 등 K-주소의 브랜드화 및 이를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
- ▶ 주소정보와 첨단기술을 융합한 주소지능정보서비스 산업 규모* 증가 전망
- * 주소정보시장(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) : ‘21년 1,336억 → ‘30년 1조원

□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과를 통해 산업 진흥 도모

- (디지털정부 수출) 높은 국제적 위상이 수출로 이어지는 생태계 조성
 - 해외진출을 고려한 디지털서비스 개발, 유무상 원조사업 적극 활용으로 기업리스크 경감, 전문인력 육성 등
 - ※ '(가칭)디지털정부 해외지원센터' 설치해 상설지원 시스템 구축('23년)
 - 단기적으로 '23년 6억불, 중장기적으로 '27년까지 누적 80억불 수출 목표'
 - * 과거 5년간 연평균 수출 3.5억불, '11~'21년 누적 40억불

▶ 최근 10년간 ICT 서비스 수출은 7배 증가했으나, 디지털정부 수출은 2배 증가

- (클라우드 시장 창출) 기관 특성·여건별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활용모델(멀티·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) 확산 등 산업 마중물 역할 수행
 - 주요 업무시스템도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
 - ※ 클라우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설계(클라우드 네이티브) 방식 적용
- (데이터 경제 선도) 데이터 생성·활용 국민참여 및 창업·기업 성장 지원 강화
 - 시장수요가 큰 공공데이터를 묶어서 제공하는 '패키지 개방' 및 비정형데이터(이미지, 동영상, 문서 등) 개방 확대
 - 민간 협업으로 서비스 완결성이 높은 데이터를 수집·구축*해 개방
 - * 예) 골목상권 데이터(업종별 인허가정보 등) 개방(→상권분석서비스 개발)
 - 데이터 활용역량 수준별 맞춤형 패키지(4종)* 제공, 창업 전문기관 연계
 - * 역량교육, 큐레이션, 데이터 중계, 사업화·투자유치

□ 옥외광고산업 발전의 변곡점 창출

- (자유표시구역 확대 등) 현재 1개 지역(강남 코엑스 일원, '16년 12월)에서 운영 중인 '자유표시구역*'을 추가 지정('23.10월)하여 지역경제 활성화
 - * 신기술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자유로운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 테스트베드 지역
 - 자유표시구역 내 디지털 옥외광고물 규제 네거티브 등을 추진하여 옥외광고산업 발전 모델 확산
- (규제특례) 특례*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 옥외광고 산업 정착 도모
 - * 화물차 측면 활용 디지털 상업광고, 버스유리창 활용 디지털 광고 등 22개 지원

▶ 세계 디지털 옥외광고시장 '20년 148억불 → '27년 330억불로 연평균 13.4% 성장 전망

2. 어려운 민생 살리기 총력 지원

□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민생 회복의 마중물 마련

- (재정집행 총력) 상반기 집행 목표(60.5%, 283조 중 171조) 달성을 위해 현장점검, 장애요인 분석·해결,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등 정책 수단 동원
※ 통합재정안정화 기금('21년말 23.3조), 순세계잉여금('21년결산 31.5조) 활용 추경 편성 추진
- (민생재정 중점 관리) 취약 계층·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 예산 (14개 항목, '22년 97조원) 및 소비·투자 예산(43개 항목, '22년 92.5조원) 집중 관리
* 사회보장적수혜금, 의료 및 구호비, 운수업계 보조금 등

□ 부동산 침체 등을 고려, 과도한 국민 세부담 등 경감

- (취득세 정상화) 과도한 주택 취득세 종과세율을 정상화*하고,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·신혼부부 등 취득세 일괄 면제** (200만원 한도)
* ① 2주택까지 종과 폐지 및 3주택 이상 종과세율 50% 인하,
② 일시적 2주택자 처분유예기간 완화: (기존) 조정대상지역 2년 / 기타 3년 → (개선) 일괄 3년
** 현재 주택가액(수도권 4억, 비수도권 3억), 소득(연 7천만원 이하) 기준 충족시 취득세 감면
- (재산세 완화) 과표상한제 도입(5%)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*을 통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, 고령자·장기보유자 재산세 납부유예제도** 신설
* 공정시장가액비율 현 45% 이하로 조정 → 1주택자 재산세 '20년 이전 수준 환원
** 주택의 상속·증여·양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여 은퇴한 고령자 등의 부담 조절
- (열람권 확대) 전세사기 방지위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에 대한 임차인 열람권 확대* 추진
* 계약일 이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 / 「지방세징수법」 개정안 국회 계류 중
- (의무매출채권) 국민이 자동차 등록, 계약체결 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·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 상향(1.05% → 25%) 및 매입의무 일부 면제*
* 1,000~1,600cc 미만 비영리 승용차 이전·등록, 2,000만원 미만 공사·용역·물품 계약의 경우
※ (기대효과) 금리상향 연간 국민부담 2,800억원 감소 / 매입면제 연간 116만명, 국민부담 920억원 감소

□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등 생활물가 안정

- (공공요금 동결) 지자체와 협의하여 상반기 지방공공요금* 동결 및 인상 최소화, 연차별 인상계획 수립을 통한 시기 분산
* 예) 상하수도, 쓰레기봉투, 대중교통 등
- (재정지원)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*, 물가안정 우수지자체 재정 지원** 확대
* (착한가격업소) 16.5억원(국비 최초지원) / ** (물가안정 특별교부세) '22년 110억원 → '23년 200억

3. 지방 행정·재정의 건전성 확보

□ 법과 원칙에 기반한 지방행정 구현

- (공무원단체 대응) 정당한 노조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,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
 - 건전한 노사관행을 실천하는 기관은 발굴·포상, 건전한 노사문화 확산
- (비리 근절) 지자체 공무원 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해 엄정 감사
 - 사전 정보분석을 토대로 비리 취약분야*를 선별해 집중 감찰
 - * 토착비리(이권개입, 인사전횡) 건축·건설비리(인허가, 불법하도급 묵인), 생활속 불공정

□ 지속 가능한 지방 재정 운영을 위한 관리 강화

- (지방채 관리) 최근 2~3년간 급격하게 증가*한 지방채무 감축을 위해,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 축소 및 차환채 비율 축소**
 - * (지방채무 규모) '18년 24.5조 → '19년 25.1조 → '20년 30.0조 → '21년 36.1조
 - ** (차환채 한도외 인정비율) '19년 25% → '20년 100% → (목표) '24년 80% → '25년 50% → '26년 30%
 -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 비율은 지방채 상환에 의무적 활용 검토
 - ※ 국가는 세계잉여금 중 일정비율을 국채 상환에 의무적 사용토록 규정(「국가재정법」 제90조)
- (보증채무) 보증채무 금액·내용 변경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고, 보증채무 포함 사업은 모두 중앙투자심사 의무화
 - ※ 보증채무 및 확약, 부동산PF, 펀드 등 신종 투자사업에 대한 재무성 검토 강화
- (현금성 복지 관리) 지자체 현금성 복지를 분석 및 공개하고, 인센티브와 패널티*를 부여하는 등 책임성 강화
 - * 중위단체와 비교, 현금성 복지 절감시 인센티브, 과다 지출시 패널티 부여

□ 지방보조금 책임성·투명성 제고

- (자체조사) 지자체별 지방보조금 자체조사* 실시, 행안부 종합점검 추진
 - * (점검항목) ①목적외 사용 여부, ②부정수급 여부, ③회계처리의 투명성
- (제도)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수행배제 기간(5년 이내) 명확화 및 수행배제 대상 확대*
 - * (현행) 지방보조사업자, 지방보조금수령자 → (개선) 부정계약업체 추가
- (시스템)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('23.1월 개통)으로 업무 쉐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하여 부정수급·목적외 사용 차단, 정보공개 및 모니터링

약속 5 「성숙한 공동체」

◇ “사회갈등과 분열을 줄이고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것이 국가 발전과 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함” (‘22.12.21,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성과보고회)

1. 민간단체 지원 투명성 제고

국정과제

□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

- (일제정비) 중앙 및 시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통해 등록요건 미비 단체 일제정비 추진(~'23.2월까지)
- (투명성 강화)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심사시 회계평가 중요도 상향 조정, 시스템 고도화로 회계 컨설팅 기능 강화* 추진
* 시스템에 등록된 지출내역과 지침을 연계하여 회계 오류사항 자동 검증
- (사업 선정 공정성 제고) 사업 선정위원 이해충돌 방지 강화, 사업 선정 결과 공개항목 확대 등 추진

□ 체계적 기부금 관리로 투명성 확보

- (투명성 제고) 기부금 모집단계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「기부금품법」 개정 추진
※ 기부금품 모집 등록시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, 현장 모금시 영수증 발급 명확화 등
- (공개 확대)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로 사용내역 공개범위 세분화 등 추진

2. 미래지향적 과거사 문제 해결

- (명예회복·보상) 4·3사건 희생자 보상(약 1만여명, 9,050억, '22~'26년), 여순사건 진상규명('22~'24년), 5·18관련자 보상 신청 재개('23.7월~12월)
- (화해·기억) 추모시설 조성·관리(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시설 등),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및 민주인권기념관 건립('24년)

3. 자원봉사 활성화 촉진

- (봉사 캠페인) 자원봉사 센터, 국민운동 3단체 등과 함께 취약계층 돌봄, 지역사회 문제 해결 동참 등을 위한 캠페인 전개
- (실태조사) 비공식 봉사* 등 새로운 방식의 봉사를 포함하는 자원봉사 실태 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 마련
* 봉사단체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·즉흥적 자원봉사 활동(플로깅 등)

경찰 : 민생치안 확립 및 준법질서 구현

□ 든든한 민생치안 확보

- (민생 확보) △ 전세사기, 보이스피싱* 등 악질 민생경제 침해범죄, △ 마약류 범죄** 등 국민의 일상을 병들게 하는 주요 민생범죄 근절
 - * 범정부 통합신고·대응센터 구축 추진 / ** 다크웹 전문수사팀, 마약류관리시스템 고도화 등
- △ AI·빅데이터 기반 범죄예측·분석시스템*(Pre-CAS)을 통한 선제적 범죄예방 체계 구축 △ 유관기관 협업** 강화 등 생활 주변 불안요인 해소
 - * △범죄112신고 △인구 등 공공데이터를 통합 분석 지역별 범죄위험도 산출 및 예방적 경찰활동 확대
 - ** 범죄발생 시 신속 출동을 위한 경찰·지자체 CCTV관제센터 영상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
- (사회적 약자 보호)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한층 강화된 현장조치*와 함께, 신규 보호수단** 등을 통한 피해자 안전조치 고도화
 - * 유치장 유치(잠정조치 4호) 등 적극적 격리 / ** △인공지능 CCTV △고성능 스마트워치 등
- △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유통차단 △ 범죄수익 환수 등 피해회복을 지원하고, 실종정보*·유전자분석 시스템 고도화 등 아동 보호체계 내실화
 - * △영상정보 기반 추적시스템 △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험도 판단·예측모델 등 도입

□ 엄정한 법질서 확립

- (고질적 불법행위) 건설현장 폭력·갈취 등 조직적 불법행위*, 불법 집회·시위** 등 준법질서를 저해하는 고질적 불법행위 엄정 대응
 - * 신속대응팀 즉시 현장출동조치, 악질적 사안은 시도청 강력범죄수사대 중심으로 적극 대처
 - ** 통행권 침해소음기준 초과 등 불법행위 조치 강화, 폭행업무방해 등 고질적 위협행위 현장검거
- (사회질서 확보) 공직자·채용 비리 등 사회신뢰를 저해하는 병폐 유발행위,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 기획수사 전개
- (교통질서 확립) △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△ 보행안전 인프라(음성안내·접근감지 등) 확대 △ PM 전용면허 신설 등 교통 안전정책 고도화
 - ‘안전속도 5030’·‘어린이 보호구역’ 등 제한속도 적용 구간의 교통 환경을 분석, 탄력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안전과 소통의 조화 추진

□ **확고한 안전시스템 구축**

- (인파관리) 112신고 연관성 분석 시스템*을 통한 반복 신고 위험성 탐지 고도화, 다기능 현장대응 장비 도입** 등 인파관리 체계 혁신
 - * △112신고 △교통량 △인파흐름 등 데이터 활용 / **△고공 상황관리 타워 △방송조명차 등
- 안전관리계획 수립(지자체)·위험성 평가(경찰) 등 관계기관 협업 강화
- (법적기반) 주도적인 위험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법 상 소방·지자체의 대피명령에 준하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것을 가칭 112기본법에 반영 검토
 -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안전관리위원회 실질화(재난안전법), 질서유지 등 안전관리를 민간경비가 수행(경비업법) 등 관계법령 개정 추진
- (상황관리) 본청·시도청 상황팀장을 경정→총경급으로 배치하여 24시간 전종 대응체계 구축, 경찰서장 자격심사제 도입 등 현장관리 역량 제고
 - △다목적 당직기동대 운용 △112신고 자동 전파 앱 개발* △경찰·소방 협의체 운영 및 관계기관 공동 대응훈련 등 위기대응 체계 고도화
 - * 중요상황 발생 시 관서장·현장 경찰관에게 자동 전파, 보고의 중첩성·판단의 용이성 제고

□ **선도적 미래치안 전개**

- (인프라 구축) 신설된 미래치안정책국을 통해 △미래치안전략 △첨단 장비·시스템 등 연구개발(R&D) △AI·사이버보안 등 선도적 추진
 - 중장기 치안전략인 '경찰 미래비전 2050' 역점 사업을 통해 장비·시스템을 혁신하고, 인력→시스템 중심으로 경찰운용 패러다임 개선
 - ▶ (정보화) △AI 맞춤형 교육 플랫폼 △다크웹 불법행위 추적기술 △과학수사 플랫폼 등
 - ▶ (R&D) △인공지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△사이버보안·위장수사 △차세대 방검·방탄복 등
 - ▶ (장비 등) △저위험권총 한국형 전자총격기 △스마트순찰차 모바일 오피스 △치안드론 등
- (과학기술 기반 치안활동) △4족보행 순찰로봇 도입 △재난·범죄현장 자동 탐지체계 개발 △차세대 CPTED 도입 등 첨단 안전시스템 고도화
 - ▶ (순찰로봇) '24~'25년 4족보행 순찰로봇 도입상용화를 위해 R&D·제반 법령개정 등 추진
 - ▶ (인공지능 통합관제) 위험행동 패턴 등 위험징후 탐지 시 경찰·모니터링 요원 등에게 즉시 알람
 - ▶ (차세대 CPTED) 비명감지 비상벨 등 사업에 IoT를 도입 전국 표준화를 위해 정책협의회 구성
- (新 항행체계) 첨단교차로 등 ICT기술 도입, 자율주행 사고분석 기술·자율차 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 등 완전자율주행(Lv4)에 선제적 대비

소방 : 선진 소방안전체계 구축

□ 예방 중심의 소방안전관리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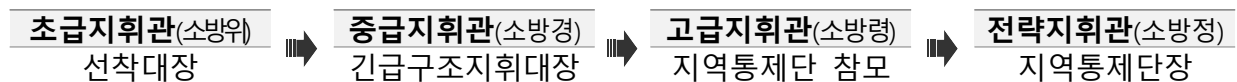
▶ 5년간('22년~'26년) 화재 사망자 10% 저감 ⇨ 화재안전도 선진국 수준* 진입

* 인구 10만명당 화재 사망자수 : 스위스 0.2 > 영국 0.4 > 한국 0.7 > 미국 1.1 > 일본 1.1 > 러시아 5.7

- (맞춤형관리) ①화재에 취약하고 대규모 피해 우려 시설 중심 안전관리*
②축제·행사장 내 현장상황실 운영, 안전요원배치 등 현장안전관리 제고
* (건설현장) 소방안전관리자 의무 배치, (데이터센터) 배터리실 화재안전기준 강화
(신종업종) 무인점포 등 안전관리 강화, (물류창고) 소방용수, 진입로 등 안전확보계획 마련
- (안전약자) 장애인, 독거노인, 산림지역 거주자 등의 안전한 주거환경 지원
※ 소화기감지기 제공, 화재 피해주민 임시주거시설 제공, 산림 인접 비상소화장치 설치(1,044개소)
- (안전교육) ①장애인·청소년 안전교육 체계화 ②전국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③메타버스 활용 온라인체험과 119체험관 맞춤형교육 운영

□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시스템 개편

- (대응체계) ①긴급구조통제단* 운영 개선으로 재난유형별 대응력 제고
②신속한 현장보고·지휘체계 확립 ③소방↔경찰 공동대응 강화(연락관 파견 등)
* (기존) 형식적·대규모 통제단 → (개선) 재난 유형·특성별 통제단 규모·형식 변경
- (현장응급의료) ①체계적·전문적 임시의료소 운영을 위한 구급지휘팀 신설
②다수사상자 재난 대비 119응급의료시스템* 구축, 관계기관 협력체계** 강화
* 환자 이송현황 실시간 추적관리하고 소방↔병원 간 정보연계시스템
** 소방청(소방서)↔복지부(DMAT) 간 현장정보 공유, 합동훈련 확대
- (구급서비스) ①인명소생률 향상을 위해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
(14→21종), ②의사가 함께 탑승하는 특별구급대(Heli-EMS 등) 운영
- (지휘역량) 현장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지휘관 자격인증제(4단계) 시행



※ 지휘훈련시설(VR 기반) 확충 : 현재(중앙, 서울, 경기, 광주, 경북) → '23년(부산, 강원)

□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기반 구축

- (특수장비) 산불·해상사고 고성능 대응장비* 도입, 특수소방차량** 보강, 신종 재난유형(전기차 등)에 대비한 장비 확충

* 헬기 배면물탱크 장착, 소방선박, 수소드론 도입 ** 대형구급차, 험지주행소방차 등



< 500톤급 소방선박 >



< 수소드론 >



< 헬기 배면물탱크 >



< 대형구급차 >



< 전기차 진화장비 >

- (상황시스템) ①119신고 폭주시 자동응대와 긴급성 판단이 가능한 인공지능(AI) 기반 '차세대 119시스템' 개발 ②재난현장 영상정보(CCTV)를 소방청 상황실로 연계 확대

※ 복지부, 지자체, 한국도로공사 및 민간보안업체까지 정보공유 확대 추진

- (출동환경)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'교차로 우선신호시스템*'과 아파트·상가 등 자동통과 가능한 '긴급차량 전용번호판**' 교체 확대

* ('22년) 13,472개소 → ('23년) 14,797개소 / 매년 1,325개소 설치

** 소방차 8,136대 중 4,809대 완료(59.1%) → '23년 2,245대 교체 목표(86.7%)

- (교육훈련) ①현장대원 '총량목표관리제*' 시행으로 상시 교육훈련 강화 ②대형·특수재난 유형별 복합재난 훈련장** 구축 추진

* 소방청에서 개발한 표준교재·동영상 활용, 관서장 책임하에 훈련(月20시간, 年240시간)

** 중앙소방학교 : 특수복합훈련장, 특수위험물질대응훈련장, 긴급구조종합훈련센터 등

□ 국민 안전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 구현

- 국립소방병원('20~'25년), 심신수련원* ('23~'26년) 등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

* 점진적 추가 확대 추진



< 국립소방병원 >



< 소방심신수련원 >

- 현장경험, 업무능력을 갖춘 하위직 출신 소방공무원 승진기회 확대*

* 현직 소방관을 소방위로 경력채용, 특별승진 대상을 소방경 계급까지 포함

119안전센터장 등 직급 상향(소방경→소방령), 소방경 근속승진 횟수(1회→2회) 확대